

정부, 도의회 균특이양사업 한시 보전 연장 건의 수용

두세훈 도의원 대표발의... 기간 4년 연장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정부가 전북도의회에서 건의한 '균특이양사업 한시 보전 연장 건의'를 수용해 당초 2022년까지만 보전되던 균특이양사업을 2026년까지 4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전북도의회는 두세훈 도의원(안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현행 지방재정분권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두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균특지방이양사업 보전 기간이 종료되면, 종전에 비해 2023년부터 매년 전복은 2,239억원, 전남 4,263억원, 경북 1,798억원의 세입이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



서 "우선 한시적 보전기간을 연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었다.

또한, 송하진 도지사도 전북도의회와 발을 맞춰 전주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에서 균특이양사업 한시 보전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균특이양사업 한시적 보전기간 4년 연장을 포함한 수용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회의 후속 조치로 관련 지방

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13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행위를 통과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균특이양사업 보전 기간이 4년 더 연장돼 전복도는 2026년까지 매년 2,239억원(총 8,956억원)의 균특이양사업비를 보전받을 수 있어 도민의 생명·안전·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두세훈 도의원은 "정부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균특이양사업 보전기간을 4년 더 연장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 또한 여전히 한시적 지원에 불과하다"면서 "균특이양사업 보전기간을 영구적인 내용으로 하는 관련 지방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가 26일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사진 오른쪽)에 벼 병해충 피해에 대한 세심한 기후분석과 내년 벼 품종 다변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적극 건의했다.

“벼 병해충 피해 세심하게 분석해달라”

송하진 도지사, 허태웅 농진청장에 건의

송하진 도지사가 26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을 방문해 벼 병해충 피해에 대한 세심한 기후분석과 내년 벼 품종 다변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을 만나, 도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기후분석 등을 요청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기준 도내 총 4만3,000ha 규모의 벼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해충이 농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어업대책법'에 따라 호우 태

풍, 한파 등 이상 기후와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해 병해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필요하다.

도내에서 발생한 병해충이 농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전북도는 지난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벼 병해충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및 재해복구 지원'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에 병해충 피해 원인 분석을 요청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벼 병해충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을 농촌진흥청의 기후 연관성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병해충은 중만생종인 신동진 품종이 대부분으로, 전북에서 신동진을 집중 재배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품종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송하진 지사는 내년부터 다양한 품종 재배가 이뤄지도록 농진청의 협력도 당부했다.

송하진 지사는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에게 "전북도의 병해충 피해가 기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이고, 세심한 분석을 당부드린다"면서 "내년에 농진청에서 개발한 '침묵진' 등이 농가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서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

전국 만18세 이상 국민 10명 중 7명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정서적 어려움까지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민지원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발간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국민지원금의 정서적 효과성을 분석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응답자의 68.9%가 국민지원금이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기준 응답자의 76.7%가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정부가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응답자의 63.9%가 국민지원금 덕분에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국민 개인이 홀로 극복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사회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였다.

한병도 의원은 "길어진 코로나19 위기로 '코로나 블루'가 격정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결과 나타난 점은 고무적"이라며 "국가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것을 넘어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기부행위·인쇄물 이용 선거법 위반 혐의자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전북도교육감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불법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28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에게 선거구인을 대상으로 댓글 이벤트를 실시해 경품을 제공하고, 후보에게 선거의 캐리커처를 인쇄된 1회용 앞치마를 제작해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총 57만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선거구인을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후보에게 선거구인과의 친교를 위해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인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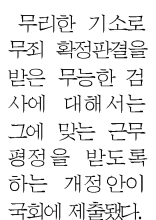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5조 및 제254조' 등을 준용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방선거가 7개월 정도 남았지만,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조기에 선거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기소권 남용검사 자질 평정 받아야

검사 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대비 유죄판결 비율 포함



무리한 기소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무능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근무평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8일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해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인권옹호, 청렴성, 적시성, 추진력, 합리성, 균형감, 성실성, 친절, 소통, 인화, 자기질제, 리더십, 조직운영을 포함한 평정항목을 정해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최초 기소 이후 확정판결까지 피고인이 무죄를 판결 받은 경우, 이는 검사로서의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국민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

한 근무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각 삼급별 최대 3심까지 연속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각 재판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검사가 국가 사법시스템을 남용했다는 측면에서 이에 응당한 인사처분을 받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 확정 전이라도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 검사를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책임을 묻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대검찰청 무죄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무죄평정 사건 3만2,007건 중 검사 파오 건수는 4,611건(14.4%)인데, 이 파오 건수의 절반을 넘는 2,432건이 수사 미진 건수이다. 즉, 검사가 수사 미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는 만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거창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작은 부분부터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게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마한역사문화 복원·세계화, 호남 대선과제로’

전북·광주·전남 공동 건의 발전 비전 공유 등 나서기로

'마한역사문화권' 복원과 세계화를 위해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나주박물관 일원에서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 등 3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마한역사문화권 공동 발전 이행협약과 대선 정책과제에 건의하는 공동서명식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명식에는 신원식 전북도 정부부처차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3개 시도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마한 역사문화재단의 세계화(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마한역사문화재단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마한역사문화재단의 대국민 향유 활용 여건 조성(마한역사문화재단 국가문화재 지정 및 승격 확대, 마한역사문화 지원 복원 정비, 관광지원 및 홍보 등), ▲마한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확립(기초 조사연구, 유적 조사연구, 학제간 융합 심화 연구)를 대선 주요



전북도는 나주박물관 일원에서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 등 3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마한역사문화권 공동 발전 이행협약과 대선 정책과제에 건의하는 공동서명식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정책과제로 공동 건의했다.

전북도와 2개 시·도는 이번 대선 주요 정책과제 공동건의를 시작으로, 마한역사문화권 발전비전을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원식 정부부처차는 "전북은 마한의 시작점이자 중심지였고, 후기 마한의 거점지로 전북, 전남, 광주 3개 시·도와, 손을 맞잡고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세계화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마한 문화유산을 호남권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한역사문화권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전북 지역도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의 중이다. /유호상 기자

영화인 역량 증진 위한 사업 발굴

도·전북독립영화협회·KT&G 전북, 영화교육사업 협력 강화 전북독립영화제,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개막작은 '우두'

전북도와 사법법인 전북독립영화협회, KT&G 전북본부가 28일 '지역기반 영화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박영완 전북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이운재 KT&G 전북본부 부부장 등이 참석하며, 전북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뜻을 같이했다.

이번 협약은 영화 제작 및 영화인 역량 증진을 위한 사업발굴 지원 및

전북 영화산업 발전과 기간 간 교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 제작과 영화인 역량 증진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전북지역 영화인들에 대한 교육사업 추진, ▲전북 영화산업 발전과 기간 공동의 이익 증진에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이다.

한편, 올해 전북독립영화협회와 KT&G 상상Univ 전북은 마스터와 함께하는 전북다원영화 제작스쿨을 추

진했다.

영화 마스터들의 멘토링 및 제작 참여를 통해 양질의 제작 실습 과정과 지역 내 예비 영화인력을 양성하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총3편의 영화를 제작한 바 있다.

그중 '우두'는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5일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전북독립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영화문화발전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들을 상호협력해 수행함으로써 도내 영화인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더욱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